

# 김지사 “행정통합 제1의 중요 과제는 산업 유치”

### 반도체산업 육성·Y4노믹스 강조 “7월 출범후 혼선 없게 준비”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행정통합 제1의 중요한 문제는 산업 유치다. 전남·광주가 모두 잘 살도록 어느 지역이나 계층도 소외됨이 없고, 한분 한분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살·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지자체 행정통합의 지를 받으면서 ‘잘 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광주시장이 즉시 화답하고,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과 정부의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발표에 더해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이 시·도 균형을 맞추면서 선도적 역할을 해줘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은 온 시·도민과 함께 일군 역사적인 쾌거”라며 “보다 구체적인 통합 추진 로드맵을 만드는 등 7월 출범 이후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최우선과제로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의 강조 사항이기도 하고 행정통합 관련 각종 시·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다.

김 지사는 “젊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Y4-노믹스 비전을 발표했는데, ‘Y’는 젊은 세대(Younger)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남·광주

에 깔대기처럼 집중한다는 뜻도 담겼다”며 “반도체와 AI, 로봇, 에너지,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산업부터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까지 고루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남부권 반도체벨트’를 언급할 때, 확고한 뜻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통합특별시에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수도 성장판을 바꾸는 획기적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반도체산업 유치가 임박해오고 있다. 반도체산업이 전남·광주에 오면 낙후의 대명사는 속살이를 딛고 판을 바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민선 7·8기 많은 일을 이뤄내 골짜기 수준이었던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늘어 2024년 ‘1인당 총생산’은 전국 4위,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8위를 달성하는 등 경제 수준이 많이 올랐다”며 “통합특별시는 1·2위를 넘보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반도체산업이 오면 1위까지 되지 않겠다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지방수도 관광산업 대전환 ▲2026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춘 섬 반값여행 추진 ▲지방도·지방어항 등의 국도 및 국가어항 승격 지속 건의 등을 지시했다. /김재정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 신정훈 “준연방제 수준 분권형 자치정부로”

###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인구 350만명·소득 5만 달러 완성”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특별시를 중앙의 지시를 수행하는 하위 단위를 넘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준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자치정부로 만들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신 위원장은 “지금 전남·광주에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전략이고, 전략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실행의 리더십”이라며 “광역의 권한을

다시 시·군·구 기초 정부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행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의 ‘신남방 경제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인구 350만명, 1인 당 소득 5만달러, 300조원 투자 기반 완성으로 청년이 돌아와 창업하고 세계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부산·경남의 북극항로 전략에 대응해 전남·광주를 글로벌 사우스와 연결하는 남부 공급망의 허브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여수·광양·목포의 항만과 무안국제공항,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거점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 4대 핵심 산업 전략으로 ▲에너지 통합 산업벨트 구축 ▲제조 고도화 ▲농수산 국가 식량안보 산업 육성 ▲AI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 3대 특화 전략으로 ▲광주 공항 부지 ‘AI 로봇 산업 캠퍼스 및 센트럴파크형 미래도시’ 조성 ▲총장로 ‘G-아레나, E-스포츠클럽단위’ 탈바꿈 ▲1조원 규모 청년 창업·도전 펀드 조성 등을 내놓았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할 20조원의 재원은 교통·의료·돌봄 등 민생 분야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며 “전남·광주가 국가 전략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남부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기자

## 황경아 남구의원, 남구청장 출마 선언

### “대전환 시대 혁신 행정 펼칠 것”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이 6·3 지방선거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예비후보는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상태인 광주 남구의 현상유지형 관리행정을 끝내고 대전환 시대에 맞게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혁신 행정을 펼칠 것”고 출마표를 던졌다. <사진>

황 예비후보는 “정치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도구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남구의 현실을 고려해 가숙화, 청년층 유출, 산단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 침체, 돌봄 수요 급증, 원도심 노후화 등 복합적 구조 문제로 진단하며 “구청장이 직접 방향을 잡고 조정해야 할 과제인 만큼 당선 즉시 태스크포스(TP)를 가동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예비후보는 남구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산업·일자리 혁신 ▲골목경제 회복 ▲남구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실행 중심의 책임행정을 제시했다.

황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웃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른이 존중받고, 주민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남구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기자

## 민형배, 오늘부터 ‘시민주권 경청투어’ 재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공산)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환영 입장을 내 “이번 법 통과는 전남·광주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별법으로 전남과 광주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비전인 ‘5극

3특 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 방향으로 ▲국가성장축 도시 조성 ▲AI·에너지 산업수도 구축 ▲분권형 특별시 완성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진수기자

민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4일부터 ‘시민주권 경청투어’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청투어는 4일 오후 4시 송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광주 남구 경청투어’를 시작으로 해남·무안·신안 등 전남 전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 의원은 “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통합의 내용을 채워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경청투어는 지역 격차 해소 방안, 지역 맞춤형 산업구조 설계, 20조원 활용 방안 등 핵심 의제를 두고 시·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속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인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